한국경제포럼 제 9 권 제 3 호 1-23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발전을 위한 제언*

김 용 진**

논문초록

경제학이 한국적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한국 경제에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가 당면하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풀려야 한다. 첫 째는 수학적 방법론에 치우친 주류경제학의 현실과의 괴리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과 문화와 역사가 다른 한국의 경제현실과의 적합성 문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와 비판적 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다. 그리고 부분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은 저학년 때에 철학, 사상사, 역사, 제도론,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을 학습하여 폭 넓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은 한국의 주요 경제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 설명 예측하며, 그리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인적자원이 적절하게 투자되어,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연구와 교육의 자생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연구업적을 위한 연구보다는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가슴과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한국적 경제학, 다원주의, 자생적 생태계, 인센티브 구조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0, A20

투고 일자: 2016. 10. 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6. 10. 14. 게재 확정 일자: 2016. 10. 20.

* 본고는 2016년도 한국경제학회의 경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경제학회, 논문 게제를 허락해주신 편집위원장, 논평을 통하여 더 좋은 논문이 되도록 도와주신 두 익명의 논평자, 그리고 김진에게 감사드린다.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yongkim@ajou.ac.kr

Ⅰ. 서 론

최근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수출 제조업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부족한 일자리 창출, 비싼 부동산과 교육비, 남북통일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군사 문제 등 막대한 비용을 치려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시급하다.[1] 이 문제들은 한국 경제의 선진국을 향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수학모형 중심의 경제학의 한계와 한국의 고유한 문제를 도외시하게 하는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등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경제학의 학문으로서의 한계와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위에 언급한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의 경제학자들이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연구 교육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2007년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인과 처방에 관한 경제학 논문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그 발생 원인과 파급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정부정책 등이 여러 학파에 따라 다르고 이 이론적인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각 국은 각자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는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1970년대 이후 합리적 기대가설과 시장균형이라는 신고전학파의 가정 하에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기술된 일반균형 모형이 발전하였으며, Prescott 등에 의해서 실물경기변동이론 real business cycle 이라는 학파가 수학적 방법론으로 무장하여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컴퓨터 발전에 의해 계산 비용이 낮아져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DSGE라는 첨단 무기가 등장하여 많은 논문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도 수학과 실험이라는 근대 자연과학의 정신과 방법론을 완벽하게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 있어 수학 모형의 지나친 사용은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뿐만 아니라 경제학자와 일반사람과의 소통과 학부학생의 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낳고 있다.[2]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여러 학파 이론들이

---

1) 통일 안보 군사 문제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며 산업구조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이 경제 문제이다.

2) “One of my students wrote on a recent exam, “I took two economics classes before yours, and I had a hard time find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y of economics, firms and

이 정치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가정을 전제로 한 이 이론들은 같은 현상에 대해 원인과 결론에 대한 차이가 줄지 않고 있다.[3)]

또 다른 주류 경제학의 문제는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인 사회 현상은 한 나라의 역사 문화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는 각 나라의 사회 현상과 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미 문화권에서 발전된 주류 경제학의 주된 관심은 한국 사회의 고유한 경제 문제를 이해 설명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서 좀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방법론적으로 치우친 경제학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구 대상이 역사와 문화가 다른 사회인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경제 문제를 이해 설명 예측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측면과, 연구 대상으로서 주류 경제학의 토대인 영미와는 한국이 역사 문화가 다른 사회라는 측면, 이 두 측면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 유용한 경제 개념, 방법론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의 유용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한국 사회를 위해 한국적 경제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열거한다. 그리고 제Ⅲ

---

the entire society." Given that the overall objective of economics is the study of the economy (isn't it?) and given that the economy is comprised of firms and individuals, isn't this a damming criticism? If this was an isolated comment, I could cavalierly dismiss it, but I hear it time and time again. My heart stops when students tell me that they were excited to begin their study of economics only to be turned off by an onslaught of deductive logic and abstract models with little resemblance to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Indeed, "in the business, government and other non-academic communities, the perception is widespread and growing of economics as a technical and rarefied discipline, of questionable relevance and limited practical use" (Hodgson 2001, p. 9)." (Reardon, 2013, pp. 4-5).

3) 주류경제학(mainstream economics) 에 대한 정의가 위키피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한다. 본 개념은 최근 발전된 신고전주의와 신케인즈 학파를 포함한다. "Mainstream economics is widely accepted economics as taught across prominent universities, in contrast to heterodox economics. It has been associated with neoclassical economics and with the neoclassical synthesis, which combines neoclassical methods and a Keynesian approach to macroeconomics. … The term "mainstream economics" came into common use in the late 20th century. It appears in 2001 edition of the seminal textbook Economics by Samuelson and Nordhaus〔5〕 on the inside back cover in the "Family Tree of Economics," which depicts arrows into "Modern Mainstream Economics" from J. M. Keynes (1936) and neoclassical economics (1860-1910)."

절에서는 한국적 경제학 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한다. 제Ⅳ절에서는 한국 경제에 있어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주요 경제학 문제들을 찾아 보고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 요약한다.

Ⅱ. '한국적 경제학'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학자가 당면한 문제

> Piketty는 경제학을 사회과학으로 생각한다. (그는 "사회"를 강조한다.) 이 사회과학은 (i) 결코 사소하지 않은 중요한 질문을 할 때와 (따라서 괴짜경제학과 randomistas에 작별을 고하라), (ii) 무의미한 모델 설정 대신 실증적이고 역사학적인 방법을 사용 할 때에만 번성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경제학자들에게 논의되어 왔고, Piketty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것을 새롭게 제시한다. 즉, 그의 논문에서 이 두 가지 요구 사항들이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진 경제학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여준다(Milanovic, 2014, p. 18).[4)]

한국의 경제학자 입장에서 현 주류경제학을 어떻게 발전 변형시켜야 한국 사회에 유용한 '한국적 경제학'이 되겠는가? 우선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1. 지나친 수학 의존성

아래에 인용한 Piketty, Shiller 그리고 Krugman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류 경제학이 수학에 너무 의존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히 2007, 2008의 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에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즉, 너무 추상적인 가정 하에서 수학 문제만 풀다 보면 현실의 중요한 사실을 연구하기 보다는 문제풀이에 급급할 수 있어,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게 가정된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 (Piketty) regards economics as a social science (where the emphasis is on "social") that can flourish only if (i) it asks important, and not trivial, questions (so adieu Freakonomics and randomistas), and (ii) uses empirical and historical methods instead of sterile model-building. These issues have been debated ad nauseum by the economists, and Piketty has nothing new to add to that, except perhaps in a most important way—namely, by showing in his own work how these two desiderata should be combined to create economic works of durable importance." (Milanovic, 2014, p. 18).

가설 때문에 공허한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문헌연구로는 이왕휘(2014), 철학적 논의로는 이상욱(2014) 참조).

> 단순하게 말하자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역사학적 연구와 다른 사회과학 학문과의 협력을 희생하며, 수학과 순수 이론적이며 때때로 매우 이념적인 가정에 대한 유치한 열정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과 그것에 대답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 학제에 관련된 논란과 영역 싸움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에는, 이 책은 경제학만큼이나 역사학의 작품이다(Piketty, 2014, p. 29).
>
> 그러나 Madrick이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이며 그들이 모든 가격과 그들이 필요한 생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명백하게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고상한 모델이 실제 세계를 나타낼 수 있을까? … 경제학자들은 현실을 자유시장의 이상적인 비젼으로 표현했으며,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보이는 매혹적인 수학으로 꾸몄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시장이 나빠졌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 놓지 않았다(Krugman, 2014).[5]

같은 맥락에서 Shiller(2013)는 경제학이 수리적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수학은 피할 수 없으나, 행동경제학에서 보여주는 심리적이며 인간적인 요소를 어떻게 수학과 같이 조화롭게 담아 내어 인간의 경제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6]

---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put it bluntly, the discipline of economics has yet to get over its childish passion for mathematics and for purely theoretical and often highly ideological speculation, at the expense of historical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the other social sciences. … We must start with fundamental questions and try to answer them. Disciplinary disputes and turf wars are of little or no importance. In my mind, this book is as much a work of history as of economics." (Piketty, 2014, p. 29).
"Yet as Madrick says, these assumed conditions – including the assumption that people "are rational decision makers, and that they have all the price and product information they need" – are manifestly not met in practice. What, then, do the elegant models tell us about the real world? … Economists presented as reality an idealised vision of free markets, dressed up in fancy math that gave it a false appearance of rigor. As a result, the world was unprepared when markets went bad." (Krugman, 2014).

6) "My belief is that economics is somewhat more vulnerable than the physical sciences to models whose validity will never be clear, because the necessity for approximation is much stronger than in the physical sciences, especially given that the models describe people rather than magnetic resonances or fundamental particles. People can just change their

또한 경제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무장된 수학적 모형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하고 있는 연구와 학부 수준의 경제학 교과서 내용과는 큰 괴리가 존재하여 이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7]

2. 주류경제학 내의 상이한 패러다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류경제학의 흐름이 Fresh Water 와 Salt Water Economics 사이에서 시대와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이 둘 사이의 이론적 스펙트럼에 있어 한국적 경제 현실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위치 또한 시간과 시대에 따라 변할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에 관련된 이론적 편향은 아래 Krugman의 지적대로 정치와 언론의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에 편승하는 경제학자들도 일조를 한다.

> 게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학자들은 이 것에 대한 대책에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대공황으로부터 75년동안 비슷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경제학계는 진실의 순간이

---

minds and behave completely differently. They even have neuroses and identity problems, complex phenomena that the field of behavioral economics is finding relevant to understanding economic outcomes. But all the mathematics in economics is not, as Taleb suggests, charlatanism. Economics has an important quantitative side, which cannot be escaped. The challenge has been to combine its mathematical insights with the kinds of adjustments that are needed to make its models fit the economy's irreducibly human element." (Shiller, 2013).

7) "Ultimately, the teaching of economics boils down to the telling of stories. In the principles of economics textbooks, we tell stories that are meant both to give students a sense of what economic analysis is (often expressed as teaching students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and to provide students with insight into how the economy operates. For most undergraduates, the mathematics used in cutting-edge modern economics research is the equivalent of Greek, and thus, the textbook authors have been, understandably, slow to incorporate the changes. The economic approach in the micro textbooks in large part still reflects the research approach to economics that economists followed in the 1930s to 1960s. In fact,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textbooks still reflects the structure that was developed in the 1950s with Paul Samuelson's textbook (Samuelson 1948). With the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gulf between the research that economists do and the training in mathematics that undergraduates have growing ever wider, it becomes harder and harder to relate what economists do to what they teach." (Colander, 2005, p. 252).

> 다가왔을 때 완전히 나뉘었다. … 시카고의 경영대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의 대표 표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오바마의 경기부양정책이 실업률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제, 경기부양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없으며, 가차없는 정부지출의 삭감이 실제로 경제를 부양시킨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직업이 보증하는 영향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왜 그럴까? 부분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답은 새로운 매체가-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편향된 매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장려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견해를 말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긴축에 대한 열광은 주류 경제학 때문이 아니라, 주류경제학에도 불구하고 크게 확산 되었다(Krugman, 2014).[8]

또한 주류 패러다임과 정상과학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이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현 주류경제학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9]

---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Furthermore, once crisis struck, economists seemed unable to agree on a response. They'd had 75 years since the Great Depression to figure out what to do if something similar happened again, but the profession was utterly divided when the moment of truth arrived. … Chicago's own business school regularly polls a representative sample of influential economists for their views on policy issues; when it asked whether the Obama stimulus had reduced the unemployment rate, 92 per 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it had. Now, it's true that the relative handful of economists claiming that stimulus can't possibly work, or that slashing government spending is actually expansionary, have a much higher profile than their numbers or their influence within the profession warrants. Why? Partly, the answer is that the news media – especially but not only partisan media like The Wall Street Journal's editorial page – have promoted the views of economists they like for political reasons. Partly, also, it's because politicians listen to economists who tell them what they want to hear. … But austerity mania has to a large extent spread despite mainstream economics, not because of it." (Krugman, 2014).

9) "The problem with neoclassical pedagogy is threefold: First, a disconnect between what is taught as subject matter and how the world works. … Second, the wilful ignorance of the social sciences and the physical sciences, particularly physics and mathematics. … Third, neoclassical pedagogy is anti-pluralist. Instead of enabling students to grasp the complexity of our problems with a multi-faceted emphasis on differ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neoclassical economists train students to think like economists – as if all economists think alike – and that only one perspective exists, while denying the legitimacy of all others." (Reardon, 2013, pp. 5-6).

기존의 주류 패러다임은 관련된 회원들의 동의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결정에 의해서 주류 패러다임으로 결정된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주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들에 비해 더 낫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그리고 패러다임 간에 incommensurability가 존재하여 여러 다른 패러다임 간에 있어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도 어렵다. 또한 주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류 패러다임의 고착화(Lock-in) 효과에 의해서도 비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주류 패러다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고 틀 속에서, 현상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 상보적 관점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필요하다.[10]

> 1970년대 이후, 낮은 관세, 자유로운 자본흐름, 산업 보조금의 철폐,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균형 예산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은 경제학 정설이었다. 이 철학은 -훗날 Washington consensus로 알려진-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문의 기본적 철학이 되었다. 산업혁명 동안, 오늘날의 부유한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매우 반대되는 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높은 관세,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자금 통제, 그리고 고정 환율. 무역은 확대되었고, 자본은 어쨌거나 유입되었다. … 워싱턴 컨센서스의 처방을 무시한 국가들은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 빠르게 성장하였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개선은 I. M. F와 세계은행이 윗 나라들에 대한 통제를 낮춘 이후, 오직 200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났다(Madrick, 2014).[11]

---

10) 여기에서 언급하는 다른 패러다임들은 아래의 위키피아에서 정의하는 비주류경제학 뿐만 아니라 역사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른 학문 분야도 포괄한다.
"Heterodox economics" refers to schools of economic thought or methodologies that are outside "mainstream economics", often represented by expositors as contrasting with or going beyond neoclassical economics. "Heterodox economics" is an umbrella term used to cover various approaches, schools, or traditions. These include socialist, Marxian, institutional, evolutionary, Georgist, Austrian, feminist, social, post-Keynesian (not to be confused with New Keynesian), and ecological economics among others.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the 1970s, economic orthodoxy has argued for low tariffs, free capital flows, elimination of industrial subsidies, deregulation of labor markets, balanced budgets and low inflation. This philosophy – later known as the Washington Consensus – was the basis of advic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gave to developing countries in return for financial help. The irony is that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today's rich countries – Brita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 pursued the very opposite

3.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

아래 인용한 강명구(2011)와 주형일(2011)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구의 사회과학의 발전이 서구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구의 사회과학의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유용성이 떨어지는 작업이다.

사회과학에서 이론이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서 실증적 사실 또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이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예측할 수 있게 구성된 간단한 모형들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유용한 지식과 예측 정보를 창출하고 사회에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에 대한 이론은 그 사회의 독특한 현실적인 경험과 역사에 의해서 규정 또는 한계가 설정된다. 왜냐면 특히 사회과학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universal law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local approximation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우선 한국 사회의 경제 현상에서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해 그라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시각에서 locally approximated 된 이론적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이 당면한 주요 경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재벌과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일자리 창출, 통일 안보, 수도권집중, 비싼 부동산과 교육비…)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여러 사회과학적 문제가 복잡하게 섞여 있다. 따라서 Piketty가 언급한대로 이런 문제는 수학적 언어 만으로 문제를 기술하고 풀기가 어렵고, 우리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제도 등을 고려한 학제간 연구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 주형일(2011)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류경제학의 수학적 언어에 기반한 엄밀한 연역적 글쓰기 외에도 인류학이나 역사학처럼 약간은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글쓰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어야 할

---

policies: high tariffs, government investment in industry, financial regulations and fixed values for currencies. Trade expanded, and capital flowed anyway. … Nations that have ignored the nostrum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 China, India and Brazil – have grown rapidly and raised their standards of living. Improvements in poverty and inequality occurred in Latin America only in the 2000s, after the I.M.F. and the World Bank reduced their grip on those nations." (Madrick, 2014).

것이다.

> 비서구사회, 주변부 한국에서 사회과학을 하는 작업은 이러한 현실과 이론의 관계에서 하나의 인식론차원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나와 우리의 경험과 실천, 내가 발딛고 선 사회적 맥락에서 도출되지 않고, 서구사회에서 빌려온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다시 말해 지식생산의 식민성이라는 차원이다. … 서구이론에 대한 의존을 주어진 조건이자 한계로 두고,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학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채택 가능한 인식론적 전략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첫째, 개념의 보편적 활용 전략. 가장 일반적인 전략으로서 이론에는 '국적'이 있을 수 없고, 인간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국적'의 이론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편적 설명력을 갖는 이론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 둘째의 길은 외국 이론이나 개념을 방법론적 도구(methodological tool)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 한국사회과학의 문제는 '한국적 이론'이 부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맥락의존적 개념들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 지식생산의 식민성을 넘어서기 위해 외국이론을 한국사회 맥락에서 활용하는 전략의 세 번째 길은 개념을 '맥락의존적 개념'으로 생성하는 전략이다. … 여기서는 어떻게 역사적 궤적이 다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이론(대부분이 서구로부터 이전된 이론들)을 다시 설정하거나 변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된다(강명구・이상규, 2011).

> 식민화된 지식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사고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사회와 사람들의 현실을 관찰,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연구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연구대상과 완전히 유리돼 있음을 의미한다. … 내가 보기에 질문은 어떤 형식의 글쓰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느냐라는 방식으로 제기돼야 한다. 형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글쓰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형식을 통해 구체화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논문을 써야 한다(주형일, 2011).

4.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

아래 인용한 강명구(2014)가 주장하듯이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에 대해 제도로 설정된 인센티브 문제이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학교 당국들이 학문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SSCI 등재지에 게재되면 높은 평점과 연봉을 주게 되고 이에 의해서 한국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보다는 미국문제를 풀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대학들은 SSCI

가 정년보장 계약에 필수적이며, 심지어는 정년보장 교수도 이러한 굴레를 씌우는 우매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정치 경제 권력 구조 속에서 정치권력에 편향적인 폴리페서와 학교행정 당국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은 대학의 교수평가 및 채용 정책과 관행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학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생산을 해내는 데 어떠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밝혀내려 하였다. …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임용된 교수들은 광고, 홍보, 뉴미디어, 콘텐츠 등 응용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미국 출신 박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의 연구는 주로 미디어 산업과 광고/홍보산업의 요구에 맞는 이용자-효과연구를 중심으로 미시적이고 개별화된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특정 연구주제에 따른 방법론 및 연구관심의 전형성과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윤리나 사상, 법제, 역사 등 이론과 철학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규 채용된 교수와 그들의 연구 경향성이 SSCI를 중심으로 한 교수평가 및 채용 시스템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논문의 편수나 영향력 지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현행 SSCI 중심의 교수평가 정책을 멈출 것을 주장하고, 언론학계 전반에서 어떤 교수와 학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언론학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강명구, 2014).

Ⅲ. 한국적 경제학 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안

제Ⅱ절에서 언급한 한국의 경제학자가 직면한 네 가지 문제 중 '과도한 수학 의존성'이나 '주류경제학 내의 상이한 패러다임' 등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본질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는 본고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다.[12] 따라서 본 제Ⅲ절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한국적 경제학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경제학 학문이 가지고 있는 제약 하에서,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과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라는 문제들을 해결 또는 보완할 방향과 방안을 찾아본다.

12) 이러한 경제학 학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본 제Ⅲ절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다양한 방법론과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들을 전체적 시각(holistic view)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적 경제학 발전을 위한 방향

우선 한국 경제학자가 당면하고 위의 문제들은 경제학자들의 진리를 찾는 개방적인 태도와 한국 사회와 경제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 의해 많은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13]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특정의 실증적 사실을 이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Rodrick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 분야의 이론 및 방법론과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연구자가 'craft' (사회과학자의 완숙된 연구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skill)를 가지고 연구 대상인 실증적 사실에 적절하게 융합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현상은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설명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사회과학의 여러 다른 분야들의 여러 패러다임들의 상보적인 접근에 의해서 큰 그림의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적 경제학'이란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현실 문제를, 논평자나 조언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 (democratic deliberation, debat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에서 유연하며 유용한 사고 틀과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한국 문제에 적용하는 사고의 틀은 강명구(2011)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선 일차적으로는 서구의 이론을 한국의 맥락에서 보완 또는 변형된 이론이다.[14]

2. 한국적 경제학 발전을 위한 방안

한국에서 많은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육성되고 배출되었으나, 당면한 한국의 경제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하여 한국사회에 기여하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한국의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미국 또는 선진 여러 나라들의 우수

---

13) "Finally there is the quality that existed in Adam Smith and Alfred Marshall – and, indeed, in Paul Samuelson – and in most of the other great economists: That is the quality of wishing to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Many students come to economics because they have this wish, but those who are most concerned with it are the ones who, in recent decades, have been turned off and dropped out of the field, disgusted with the lack of overt values of caring and community, and the presence of implicit values of greed and selfishness." (Goodwin, 2014, pp. 116-117).

14) 한국사회과학의 문제는 '한국적 이론'이 부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맥락의존적 개념들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강명구, 2011).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며 SSCI 등재 학술잡지 등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경제 학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해결해야 할 주요 경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유용한 정책 제안 등이 아직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중요한 한국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의 확보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 있어 계층간 갈등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및 부의 격차일 것이다.

김낙년・김종일(20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소득 격차가 심해진 이유는 Piketty가 언급한 미국의 소득분배가 1980년 이후에 급격하게 나빠지는 이유와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Piketty는 미국에 있어 1980년 이후에 최고한계세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기업의 임원들이 자기의 연봉을 높게 설정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따라서 연봉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superrich한 supermanager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는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소수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구조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에 대한 그가 제시한 처방은 이들에 대한 최고한계세율(소득, 자산 그리고 상속 기부 등에 대해서)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Piketty가 언급한 것처럼 개인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축적에 관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최고경영자와 일반직원간의 임금 격차가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미국과 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 기관, 기업들의 지위에 따른 임금 구조의 변화에 대한 장기 시계열 자료 또는 여러 경우의 사례가 필요하다. 이 자료들을 통하여 이 임금 구조가 어떠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변해왔는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15]

---

15) 이미 높아진 높은 고위직 임금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임금구조를 너무 급격하지 않도록 임금구조를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loss aversion, endowment effect 등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서 준 것을 뺏는 것은 심한 저항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Mas(2014)는 캘리포니아 모든 지방정부 직원들의 임금을 공개하게 하자 이미 공개된 지방에 비

둘째, 위의 자료가 준비되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여러 학제간 연구에 의해서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따라서 서로 상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한국적인 실증적 사실을 이해 설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구이론을 한국적 맥락으로 재해석하고, 적절하며 창의적으로 변형 보완된 이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변동 이론에 있어서도 한국의 거시 자료에 있어서 특히 1997년 이 후에 소비의 변동성이 소득의 변동성보다 커져서 선진국의 자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론적으로 또한 선진국의 자료에 의해 실증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소비균등화 이론에 배치된다. 이는 오래된 risk premium puzzle 처럼 한국의 거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이우헌(2016), Garcia-Cicco Pancrazi, and Uribe(2010) 등이 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자료와 다양한 설명을 가지고 학자는 오랜 연구와 실행에서 연마된 skill 또는 craft를 가지고 국가에 유익한 정책 또는 정책적 함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사회과학자 또는 경제학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아래 인용된 강명구교수의 제언처럼 SSCI와 편수에 의한 표피적이고 양적인 평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 논문의 양이 신임교수 채용의 기준이 되는 한, 1년에 많이 써야 한두 편밖에 쓸 수 없는 이론, 메타이론을 공부하는 학자는 자라나기 어렵게 된다. 대학교수가 되고서도 이런 연구를 하기는 어렵다. 승진, 정년보장 등 직업안정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야를 공부할 학자가 성장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 한 사람의 연구자가, 더구나 신임교수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 첫째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대학당국이 논문 편수와 SSCI저널 중심으로 교수성과를 평가하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 … 둘째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논문편수 때문에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그램에서 국내교수보

해서 새로 공개된 지방의 고위직 임금이 약 8% 감소함을 보였다.

I evaluate a 2010 California mandate that required cities to submit municipal salaries to the State, to be posted on a public website. City managers—typically the highest paid employees —in cities that had not previously disclosed salaries experienced average compensation declines of approximately 8 percent relative to cities where at the time of the mandate manager wages were already in the public domain(in Summary of Mas, 2014).

> 다 두 배나 많은 연봉을 주고 석학교수를 초빙했다. 여기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었고, 외국대학에서 SCI, SSCI 논문편수가 많은 교수들도 있었다. … 그들의 연구는 많은 경우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산업의 요구와 별다른 관련이 없을 텐데, 그들이 생산하는 영어로 된 SSCI 논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셋째,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큰 학회가 나서서 어떤 교수와 학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언론학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성찰을 하는 모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 넷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제안한다. 지금처럼 학회지들이 형식적 요건(기존문헌 검토, 방법론, 자료 분석, 결과 해석 등)을 갖춘 논문을 중립적으로 게재하는 편집정책을 계속하면, 의미 있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성찰을 보여주는 연구를 진작하기 어렵다. …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국내대학의 박사과정과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 학회가 고민해야 한다(강명구, 2014).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그들이 정책 대안을 내 놓아야 하는 한국의 고유한 경제 문제들을 진지하게 연구함으로써 '한국적 경제학'이 발전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현실 참여적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관자 입장에서 무책임한 논평이나 비현실적인 논리적 게임을 하기에는 귀중한 인적자본의 기회비용 손실이 크며,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 언급한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요한 주제들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 연구원 기업 등을 통한 학문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국의 주요 경제문제들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인적자원이 안정적으로 투자되고 육성되어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문제들은 각각 각기 다른 연구소에서 장기적인 연구와 교육의 자생적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Ⅳ. 한국 사회에 있어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주요 경제 문제들

한국이 당면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주요 경제 문제들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16]

16) 이 예시들은 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당면할 문제이며, 따라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지식의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경제학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1) 한국 경제학자의 연구 인센티브 문제

---SSCI 등의 강조에 의해서 능력 있는 경제학자는 (특히 거시경제 분야에 있어) 미국문제를 풀고 있음. 따라서 한국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는 역설적으로 미국문제를 푸는데 한국의 돈으로 지원하고 있음.

---연구의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 있어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의 관련성에도 평가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강명구(2014)의 연구가 좋은 시도임.

---또한 학자들의 소명은 일차적으로 학문 발전과 사회에 소금 또는 gadfly로서의 역할에 있음.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의 자원을 한 사회가 공유하는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배합으로 나눠 가져야 각 분야에 있어 장인들이 육성됨.

(2) 통일문제;

---정치 사회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류 경제학 방법론에 의한 설명과 대안 필요(한순구(2014), 조동호・박지연(2014)는 게임이론을 통하여 함의를 도출).

---이 통일 문제는 우리를 둘러 싼 강대국들간의 정치 군사적 역학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임. 따라서 이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여 도출된 외교 전략이 필요함. 시나리오 별로 분석 전망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 미래의 산업구조, 일자리 문제도 연결되어 있음.

---통일비용의 산출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 역사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이며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임. 특히 국제적 정치 군사 역학이 중요하므로 국제정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통일비용의 이론적 시뮬레이션과 계산은 송준혁(2014) 참조).

(3) 외교 군사 안보문제;

---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력에 대한 투자도 공장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투자임(이론모형으로 Kim and Grossman(1995) 참조).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25%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어 정치 나아가서는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는 추세(Fusion economy).

---미국과 중국과의 hegemony 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한국의 군사 외교정책의 단기적 전술과 장기적 전략은 무엇인가?

---경제학의 게임이론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에 관련된 역사적 통찰이 필요. 이 외교문제는 남북문제의 국방뿐만 아니라 국제적 분업 구조에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

---이러한 장기적인 외교 군사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의존도도 증가시킴.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 및 외교 관계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의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 군사 외교 전략에 대해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4) 수출주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개방은 필수.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비교우위는? 재벌의 규모경제와 중소 중견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은 어떻게?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개방 전략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나라 산업구조 연구는 미국의 산업구조 연구 방식과 달라야 함. 미국 경제를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끌어 가므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한국의 수출은 5개 품목이 한국의 총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이 중 각 품목은 2-3개의 대기업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몇 개의 대기업의 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보다 더 적절함.

(5)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

---막대한 자금을 육아 보육 등 출산장려 정책에 쓸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구감소는 주어진 것으로 하고, 대신 교육과 의료보건과 노년, 여성 및 청년 등의 일자

리 창출에 집중할 것인가?(고령화의 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이론연구로는 김용진・이철인(2013),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홍석철・김한경(2013) 참조).

---여러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 등을 통하여 실증 분석과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구증가와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의 축적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을 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6) 한국에 적합한 복지 모형;

---한국에 맞는 재원 조달 방식과 복지 연금제도를 도출하고 장기적으로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

---북구 영미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각기 다른 복지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형들도 계속 진화 중.

---한국의 최적 모형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친다 해도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사고의 틀이 필요(이론모형으로는 김용진・이철인(2014) 참조).

(7) 복지국가 진입에 따른 산업구조와 소유구조의 변화;

---큰 방향은 교육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이 재정의 50%가 넘는 social state로 변화할 것임.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 걸쳐 있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최적 지배구조의 design이 필요(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는 강종구・김영준(2013)들 참조).

(8) 저성장 시대에 있어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

---Piketty에 의하면 저성장에 의해 부와 소득의 분배가 나빠진다는 것이며, 분배가 나빠지면 나라 전체의 행복지수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하락하게 됨.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실업과 상대적 소득 등이 인간이 느끼는 행복에 중요한 변수임. 따라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동화나 IT 기술 등에 의해서 없어질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여 좋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의 산업구조와, 임금체계의 조정이나 조세를 통한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특히 한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 등과 관련된 정치경제 정책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부와 소득 분배의 논쟁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Piketty의 주장대로 이 중요한 논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democratic debate와 deliberation을 위해서도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한국경제에 있어 가능한 긴 기간의 부와 소득 분배에 관한 자료와 분석이 있어야, 다수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민주적 논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비록 짧은 기간의 소득 자료 만에 국한된 것이지만 김낙년・김종일(2013) 참조).

다시 요약하면, 위의 여러 한국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실증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파악된 실증적 사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구이론을 한국적 맥락으로 재해석하고 적절하게 변형된 이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경영학 역사학 등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며, 방법론도 수학적 모형뿐만 아니라 장단기 자료에 의한 사례 실증 연구도 필요하며,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하다.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또는 내부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 여러 상황 하에서의 시나리오가 확립되고 각 시나리오에 있어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한국적 경제문제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생적 연구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와 지배구조를 가진 연구 교육 기관 등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V. 결 론

Reardon(2013)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 경제학자들은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이론과 현실 세계의 경제 현상과의 큰 괴리에 당황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는 이론이 일상에서 접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때에는, 이 이론들과 이와 관련된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풀려는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학습과 연구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대중매체나 SNS 등에 오르내리는 한국의 주요 경제 문제들

은 서구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연구나 교과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다.

즉,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연구와 교육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른 성격의 그러나 서로 연결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 째는 수학적 방법론에 치우친 주류경제학의 현실과의 괴리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과 영미와 문화와 역사가 다른 한국의 경제현실과의 적합성 문제와 연구 인센티브 제도의 왜곡에서 비롯된 한국경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에 대한 연구와 따라서 교육의 부족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pluralism과 critical thinking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세가 연구에도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다.[17] 그러나 여러 다른 paradigm들에는 서로 incommensurabilty 라는 문제가 존재하여 융합이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연구 교육에 있어 연구자 또는 교육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분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은 저학년 때에 철학, 사상사, 역사, 제도론,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을 학습하여 폭 넓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방안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의 주요 경제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 설명 예측하며, 그리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인적자원이 적절하게 투자되어,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와 연구와 교육의 자생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연구업적을 위한 연구보다는 한국의 경제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가슴과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18]

---

17) "Two overlapping yet distinct views of pluralism vie for the allegiance of economics educators: an 'intellectual diversity' view in which the pluralist goal is to integrate competing paradigms into standard curricula, and a 'critical thinking' view in which the aim is to cultivate students' ability to reach reasoned conclusions in the face of analytical, empirical or normative uncertainties. This paper defends the latter view. Educators who aspire to achieve and expand the pluralistic outcomes specified in the QAA Economics Benchmarking Statement would be better served by pursuing the student-centred aim of intellectual freedom rather than the teacher-centred aim of paradigmatic diversity." (Garnett, 2009, p. 58).

18) "Indeed, as one leading economic historian, Joel Mokyr, has argued, many of the

■ 참 고 문 헌

1. 강명구, “어떤 학자와 교수를 키울 것인가: 대학평가와 지식생산,”『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0권 제1호, 2014, pp. 127-168.
2. 강명구・이상규,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 부르디외 이론의 적용과 변용, 혹은 생성,”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1.
3. 강종구・김영준, “인구고령화와 산업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3호, 2013, pp. 239-289.
4. 김낙년・김종일,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2호, 2013, pp. 1-64.
5. 김용진・이철인,『최적 복지제도의 모색: 조세 연금제도의 결합 접근』, 한국조세제정연구원, 2014.
6. _____,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즘,”『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2013, pp, 1-70.
7. 송준혁,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통합 성장 경로 분석,”『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1호, 2014, pp. 57-106.
8. 이상욱, “인간 조건 하에서의 합리성: 진화, 공감, 제도,”『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2호, 2014, pp. 1-46.
9. 이왕휘,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이론 및 방법론 논쟁: 교훈과 정책적 함의,”『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2호, 2014, pp. 47-122.
10. 이우헌, “신흥국 경제의 경기 변동,” DSGE 연구회 전문서적 시리즈 2016, 2016, pp. 1-41.
11. 조동호・박지연, “북한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이론적 분석,”『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2호, 2014, pp. 187-263.
12. 주형일, “문화연구와 글쓰기: 하나의 모색,” 2011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1.
13. 한순구, 북한의 대내외 정치 상황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1호, 2014, pp. 1-56.
14. 홍석철・김한경,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2013, pp. 71-122.
15. Bateman, Victoria, “Economists Need to Entertain the Human Element,” Cax, 24 August 2015.
16. Colander, David, “What Economists Teach and What Economists Do,”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36, No. 3, 2005, pp. 249-60.
17. Hodgson, Geoffrey, *Evolution and Institutions – On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

technologies and investments associated with the snowballing of invention in Europ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would not have taken place were inventors purely driven by financially motivated self-interest. … The Enlightenment movement, which Mokyr holds responsible for the rise of the West, involved scientists working together for motives other than profit, including to help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the public at large, or, more plainly, for reasons of natural curiosity.” (Bateman, 2015).

Evolution of Economics, Cheltenham, UK, Edward Elgar, 1999.

18. Garcia-Cicco, Javier, Roberto Pancrazi, and Martin Uribe, "Real Business Cycles in Emerg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0, No. 5, 2010, pp. 2510-2531.
19. Garnett Jr., Robert F., "Rethinking The Pluralist Agenda in Economics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Education*, Vol. 8, No. 2, 2009, pp. 58-71.
20. Goodwin, Neva, "The Human Element in the New Economics: A 60-year Refresh for Economic Thinking and Teaching," *Real-world Economics Review*, No. 68, 2014.
21. Krugman, Paul, "The Dismal Science: Seven Bad Ideas," INYT, Oct. 6, 2014.
22. Madrick, Jeff, "Our Misplaced Faith in Free Trade," INYT, Oct. 3, 2014.
23. Mas, Alexander, "Does Transparency Lead to Pay Compression?," NBER Working Paper No. 20558, October 2014.
24. Milanovic, Branko, "The Return of 'Patrimonial Capitalism': A Review of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52, No. 2, 2014, pp. 519-34.
25.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Arthur Goldhammer, Belknap Press/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26. Reardon, Jack, "A Radical Reformation of Economics Education: Educating Real World Economists," World Economics Association (WEA) Conferences, No. 2, 2013, The Economics Curriculum: Towards a Radical Reformation, 3rd May - 14th June.
27. Shiller, Robert J., "Is Economics a Science?," Project Syndicate Economists, Wednesday 6 November 2013.

Economics as a Discipline of 'Korean Social Science'

Yong Jin Kim*

Abstract

Making economics as a discipline of "Korean social science" means to modify the mainstream economics to be more usefully utilized to understand, explain, and make forecasts about Korea's economic phenomena as well as to make government policies to improve its welfare. For this, economists in Korea face two problems. First, the mainstream economics relies on mathematics too much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economic phenomena. Second, since Korea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 unique and different from those of US and Britain, that are the birth and nurturing places of mainstream economics, mainstream economics does not tend to fit in Korea's economic phenomena. To solve the first problem, we put an emphasis on pluralism and critical thinking not only for research of economists but also for education of students. For the second problem, self-sustaining habitat, that generates researchers and students committed to 'Korean economics' continuously over time, should be constructed to study Korea's unique and critical economic problems in a focused and consistent manner. For this, proper incentive mechanisms should be structured.

Key Words: Korean economics, pluralism, self-sustaining habitat, incentive mechanism
JEL Classification: A10, A20

Received: Oct. 4, 2016. Revised: Oct. 14, 2016. Accepted: Oct. 20, 2016.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jou University, 206,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16499, Korea, Phone: +82-31-219-2744, e-mail: yongkim@ajou.ac.kr